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살려라 경제! 희망캠프' 회의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정 대표는 앞서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위기의 한나라당 어디로?

선거 패배 책임 싸고 '친이-친박계' 권력투쟁 예고

민심 수습 위해 정몽준-박근혜 '대타협' 가능성도

대승을 기대했던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대패함에 따라 심각한 선거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당장 지도부가 사퇴하면서 권력의 공백 상태가 우려되고 있으며,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간 선거패배의 책임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등 극심한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선거 패배가 확정되자마자 정몽준 대표와 정병국 사무총장 등 범친이계 지도부는 사퇴를 선언했다. 한나라당의 지도부 총사퇴는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국민의 성난 표심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정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국민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를 통해서는 정치안정을, 기초단체장 선거 등에서는 상생 정치를 일궈내라는 가르침을 주셨다"며 자성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영남권의 무소속 약진과 호남권의 한나라당 후보 선전을 "지역감정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 것"이라고 받아들였고, "충청에서의 한나라당 완패는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말로 사실상 세종시 수정 논란에 따른 충청권의 '역풍'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당분간 서열 2위인 김무성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무를 꾸려갈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기존에 사무총장을 지냈던 인사들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 6월30일(또는 7월1일)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 면모일신에 주력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6·30 전대'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가 '7·28 재·보궐선거'에서도 패배할 경우에 대비, 아예 전대를 재·보궐 선거 이후인 8월 중·후반쯤으로 연기하자는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전 대표 등 친박계와 대화합을 하지 않는 한 비대위를 꾸릴 만한 인적자원도 바닥난 상태다. 전대의 연기는,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서울 은평을 재선거에 출마한 뒤 전대를 통해 당 지도부에 복귀할 길을 터준다'는 측면에서 친박 인사들이 찬성할지 미지수다.

한나라당에 위기감이 느껴지는 것은, 여권 주류의 집권 후반기 정국구상에 연동된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단 인선과 전대에서의 당 지도부 선출 등에 맞물려 친이계 내부 및 친박계 간 대대적인 권력투쟁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선거 결과로 여권 전체가 받은 타격이 너무 크고, 정몽준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 모두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패배한 만큼 친이 주류가 친박들과 대화합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전 대표를 배제한 형태로 정국을 끌고 가는 방식은 불안한 구도라는 게 선거패배의 교훈이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친이계 한 핵심당직자는 3일 "친박들과 극심한 대결구도로 갈지, 대타협으로 갈지는 청와대의 선택에 달렸다"며 "이 상태론 세종시 수정추진이나 개헌추진도 쉽지 않은 만큼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선전' 민노·참여당 '약진' 무소속 '돌풍'

한나라, 정용화·김대식 14%대 득표 '마의 두자릿수' 돌파

민노, 광역 5명·기초의원 33명 배출 '민주당 대안정당'으로

참여당, 정찬용 '체면치레'…진보신당·평민당, 진로 불투명

■각당 광주·전남 성적표

6·2 지방선거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무소속 돌풍이 매서웠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민주노동당 등 군소정당과 무소속이 약진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려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지역민심의 변화가 감지되면서 '일당 독점'의 지역구도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무소속과 군소 야당 후보들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진입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두 자리 숫자 득표=정용화 광주시장 후보(14.22%)와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13.39%)가 두 자리 숫자 득표율을 올린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김대식 후보의 경우 광주·전남에서 나름대로 제2당 역할을 해온 민주노동당의 박웅두 후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한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광주·전남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단 1명밖에 배출하지 못했지만, 한나라당이 갖는 지역 정서를 감안하면 나름대로 훌륭한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호남 정치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정용화 후보가 국민참여당 정찬용 후보에 간발의 차이로 밀려 3위를 한 것은 집권 여당후보로서 다소 체면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노당 광역의원·기초의원 약진=박웅두 전남지사 후보와 장원섭 광주시장 후보가 3, 4위를 하는데 그쳤지만, 광주·전남 광역의원(비례대표 포함) 당선자 5명을 배출했고, 기초의원도 33명이 당선돼 진보 정당으로서 가장 큰 성과를 냈다.

민노당은 선거 초반 국민참여당의 등장에 긴장했다. 비례대표 의석 등을 국민참여당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강기갑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수차례 광주에 지원유세를 내려오는 등 선거일 전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은 것이 이번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민노당은 자체 분석하고 있다.

민노당의 기초·광역의원 약진으로 인해 민노당이 지역에서 민주당의 대안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참여당 정찬용 후보 2위 체면유지=참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당의 대안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일부 기초의원 후보들이 당선됐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당선자를 단 1명도 배출하지 못했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에 밀려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다행이 광주시장 선거에서 정찬용 후보가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를 누르고 2위를 한 것은 체면치레를 했다는 분석이다.

◇진보신당·평민당 의석 확보 못 해=진보신당은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가 5.89%로 최하위권을 기록한데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의석을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해 앞으로 활로 개척이 불투명하다.

평민당은 예상대로 선거에 출마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창출하지 못해 사실상 소멸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복잡해진 '한반도 정세'

6·2 지방선거, 日 총리 사퇴 등

국내외 정치적 변수 속속 등장

'천안함 정국' 속전속결 가능성

6월 들어서며 한반도 정세가 가일층 복잡미묘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천안함'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치전선을 그려온 남북관계와 한반도 외교지형에 예기치 못한 국내외 정치적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가시화된 변수는 천안함 공조의 '든든한 원군'인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사퇴다. 그동안 천안함 대응을 놓고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온 하토야마 총리가 후텐마 기지이전과 정치자금 논란 속에서 끝내 퇴진한 것이다.

물론 그간 일사불란한 흐름을 보이던 한·미·일의 '천안함 삼각공조'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 문제를 놓고는 정파를 초월하는 강경원칙론이 확고한 합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정치 기반이 취약해진 현 정권이 외교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놓일 개연성이다. 이는 그동안 대북제제 포위망을 구축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역할분담을 꾀해온 한·미·일 공조체제의 '견고도'에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변수는 6·2 지방선거의 후폭풍이다. 천안함 정국을 타고 압승을 기대해온 여권이 패배함에 따라 국정운영 기조 전반에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남북관계와 북핵 대응기조에도 영향을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 특히, 이번 선거에 투영된 민심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추구해온 남북관계와 대외정책 기조가 중요한 전환점에 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3일 "천안함 사건을 바라보는 민심 속에는 기존 남북관계와 대외정책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관건은 정부가 이를 어떤 식으로 수용하느냐고 태도변화를 꾀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 정부로서는 '비핵·개방·3000(10년내 북한 1인당 소득 3000달러)'에 뿌리를 둔 대북정책의 근간을 바꾸는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다, 천안함 사건이 당면한 현안으로 부상해있는 터라 당장의 가시적인 방향선회를 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한 편이다.

이에 따라 잇따라 속출한 국내정치적 변수들이 현재 진행중인 천안함 정세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여성후보 절반 당선

6·2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 지역 여성 출마자는 모두 141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70명(49.6%)이 당선됐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진보신당 윤난실 후보가 광주시장에 도전했지만 전체 후보 6명 가운데 5위를 기록하며 낙선했다. 서구청장에 도전한 민주당 김선옥 후보도 현역 청장인 무소속 전주언 후보의 벽을 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전남에서는 이 청 전 장성군수와 주향득 후보가 무소속으로 장성군수와 나주시장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도의원에는 5명이 도전해 1명, 기초의원에는 20명이 지원해 10명이 당선됐으며,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로는 57명이 나서 34명이 당선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